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69 |
|----------|-----|

발의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정현미, 한근수,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1. 제안 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실명제 기록·보존관리 및 책임관 지정·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심의위원회 설치·기능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정책실명제 등록·공개 및 변동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록 및 보존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정책
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검토한 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 수립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7조제3항 관련)

| ① 등록번호 | ② 사업명 | ③ 사업부서 | ④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5-1, 2025-2)
- ② 사 업 명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7조제4항 관련)

| | | | |
|--------------------------------------|-----------|--|--|
| ① 사 업 명 | | | |
| ② 추진배경 | | | |
| ③ 사업개요 | | | |
| ④ 사업부서 | | ⑤ 담당자 | |
| ⑥ 선정기준 | | ⑦ 사업기간 |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 | |
|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 '00.00.00 | ○○○ 시장 ○○○ 부시장 ○○○ 실장 | |
| ○ 내용 | '00.00.00 |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 |

<기재항목>

- ① 사 업 명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명을 기재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아래 항목 中 택1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정책 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5조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현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위한 위원회와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참석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만약 별도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참석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횟수는 예상할 수 없고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